

大學生 增員政策의 問題點

尹 亨 遠
(忠南大 教育學科)

1. 緒 言

어떤 나라의 학교 교육 제도를 확장하고 학생 수를 늘리는 이론적 근거는 두 가지 관점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하나는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 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교육 제도와 학생 수를 결정하는 社會需要(social demand)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교육 수준과 분야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느냐를 미리 예측해서 이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 기관의 정원을 결정하는 人力要請(manpower requirement)의 관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팽창 과정에서는 명목적 교육열로 인해서 대학교육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적당히 조정해서 學校·學科·學生數를 결정해 오다 보니 인력요청적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해 버

렸다. 그리하여 결국 대학 취학률(대학 다닐 연령층의 인구 중 실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비율)은 30%를 넘어 日本이나 美國과 비슷해졌고 유럽의 선진국(약 20% 전후)보다 앞서고 말았다. 문제는 質이 엄청난 후진 상태에 있는데 量은 선진국을 추월하였다는 데서 가증되고 있다.

하여간 무원칙적인 대학 입학 정원의 증가는 특히 제5공화국 때 두드러진 교육 실책의 한 단면이다. 결국 4년제 대학만 보더라도 '78년에 7만 명 남짓하던 입학 정원이 '88년 현재 약 19만 명을 넘어 버렸으며, 졸업자의 경우 과거 10년 동안 무려 4 배로('77년의 37,374명, '87년의 149,582명)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참으로 이유 없는 팽창이다. 그리하여 뒤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졸업자의 무취업률은 60%를 넘어 버렸다. 이 관계는 전문대

학의 경우 (<표 2> 참조)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2. 大學生 爆增의 여러 問題

어쨌든 大學 卒業者의 人力要請이나 必要의 차원에서 보면 과잉 공급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교 통계에 의하면, '80년에서 '88년 현재까지 약 50만 명 이상의 4년제 大學 卒業者가 취업을 하지 못했고 전문대학 35만 명까지 합하면 전체 대학 졸업 무취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다.

혹자는 군 입대자와 대학원 진학자를 취업자로 취급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졸업자가 군대를 안 갔거나 대학원 진학을 안 했다 하더라도 경제 구조상의 취업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실사 군 복무나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한 통계가 있

〈표 1〉 연도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 추이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입대자	미 상	무취업자
1976	34,725	2,225 (6.4)	21,299 (61.3)	4,188 (12.1)	4,454 (12.8)	2,559 (7.4)	13,426 (38.7)
1977	37,374	2,620 (7.0)	22,807 (61.0)	4,040 (10.8)	4,516 (12.1)	3,391 (9.1)	14,567 (39.0)
1978	41,680	3,241 (1.8)	26,287 (63.1)	3,007 (7.2)	4,865 (11.7)	4,300 (10.3)	15,393 (36.9)
1979	45,424	4,300 (9.5)	29,378 (64.7)	3,776 (8.3)	4,844 (10.7)	3,126 (6.9)	16,046 (35.3)
1980	49,735	6,088 (12.2)	28,349 (57.0)	4,757 (9.6)	4,796 (9.6)	5,745 (11.6)	21,386 (43.0)
1981	55,846	7,634 (13.7)	28,524 (51.1)	6,453 (11.6)	6,810 (12.2)	6,425 (11.5)	27,322 (48.9)
1982	62,688	8,401 (13.4)	33,988 (54.2)	6,535 (10.4)	7,250 (11.6)	6,514 (11.4)	28,700 (45.8)
1983	77,272	9,751 (12.6)	38,489 (49.8)	10,796 (13.9)	9,974 (12.9)	8,262 (10.7)	38,783 (50.2)
1984	90,888	10,985 (12.1)	43,907 (48.3)	16,630 (18.3)	10,761 (11.8)	8,605 (9.5)	46,981 (51.7)
1985	118,584	12,278 (10.8)	48,552 (40.9)	27,441 (23.1)	13,163 (11.1)	17,150 (14.5)	70,032 (59.1)
1986	137,848	11,165 (8.1)	51,667 (37.5)	40,553 (29.4)	13,543 (9.8)	20,920 (15.2)	86,181 (62.5)
1987	149,582	10,838 (7.2)	60,718 (40.6)	42,677 (28.5)	12,931 (8.7)	22,358 (14.9)	88,864 (59.4)

주: 1) 취업률 = $\left(\frac{\text{취업자}}{\text{졸업자}} \right) \times 100$

2) () 안은 해당 연도 졸업자 비율임.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76~1987 인용.

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대학에서 문교부에 보고된 취업률의 과대 정책분을 상쇄하지 못할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하나는 大學教育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생산재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지 모른다. 말하자면 상당히 많은 대학 진학자는 대학 교육비를 그 자체로 즐기는 소비재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教育的인 차원에서도 취업

이 목적이 아니고 人格을 陶冶한다든가 純粹學問探求의 性格도 있는데 취업을 자체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나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무취업자 모두가 교육을 소비재로 볼 만큼 부유층의 자녀일리는 만무하며 또한 순수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이 모두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업부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여간 대학 졸업생의 과잉공급 현상은 어떤 문제를 물고 올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90년을 전후하여 대학 졸업자 중의 무취업자는 엄청난 실직군을 형성(4년제 대학 약 70만명, 전문대학 약 50만명) 할 것이고, 이 문제는 그대로 둔다면 여러 가지 사회 질서의 변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 활동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질이 낮은 현상을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게 되지만 졸업자 자신들은 기존의 산업 인력보다 자기들이 더 능력이 있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 불만

〈표 2〉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졸업 진로 및 취업 추이

구 분	졸업자	전학자	취업자	무직자	입대자	미 상	무취업자
1981	51,935	6,575 (12.7)	12,777 (24.6)	8,848 (17.0)	14,342 (27.6)	9,393 (18.1)	39,158 (75.4)
1982	57,143	4,421 (7.7)	16,475 (28.8)	9,900 (17.3)	13,846 (24.3)	12,501 (21.9)	40,668 (71.2)
1983	72,632	4,417 (6.1)	23,488 (33.7)	12,422 (17.1)	19,706 (27.1)	11,599 (15.9)	48,144 (66.3)
1984	68,406	4,369 (6.4)	27,094 (39.6)	10,635 (15.5)	14,908 (21.8)	11,400 (16.7)	41,357 (60.4)
1985	73,927	6,991 (9.5)	29,556 (39.9)	11,035 (14.9)	15,282 (20.7)	11,063 (14.9)	44,371 (60.1)
1986	75,572	6,400 (8.5)	30,669 (40.6)	11,677 (15.5)	17,833 (23.6)	8,993 (11.9)	44,903 (59.4)
1987	82,657	6,458 (7.8)	33,862 (41.0)	12,690 (15.4)	20,084 (24.3)	9,563 (11.6)	48,795 (59.0)

주: 1) 취업률 = $\left(\frac{\text{취업자}}{\text{졸업자}}\right) \times 100$

2) () 안은 해당 연도 졸업자 비율임.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1~1987 인용.

은 취업 구조상의 혼란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획기적 人力定置活動(manpower displacement activity)이 필요하게 된다. 아마도 이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대학의 전공과 교육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지금의 실직자와 잠재적 실직자(단순 노동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대학 졸업자)를 흡수하는 직업 훈련 기관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인력 요청과 실제 요구(manpower need)간의 편차도 메워야 한다. 인력 요청과 인력 요구간의 편차는 이런 것이다. 어떤 공장에서 원칙적으로 제품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의 1급 기술자가 요청되는데 인건비와 기타의 이유로 실제로는 고교 졸업의 기술공을 쓰는(요구하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 창구에서 금전 수납을 하는 업무는 상고 졸업생으로도 할 수 있는(요청) 일인데 실제로는 학력 인플레로 인하여 대학 졸업자를 채용(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학력간·세대간·기능 수준간의 정치 활동이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둘째로 지금의 多量低質의 大學 卒業者가 계속 증가되면 전공과 실제 취업간의 능력 관련성이 점점 더 없어진다. 말하자면 勞働代置彈力性(elasticity of labor substitution)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대학 졸업자가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의 폭을 말하는데, 이 폭이 지금도 넓은데 더 넓어지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극도로 저하시켜서 발전은 하되 선진국 대

열에는 도저히 짊 수 없는 애늬은이의 나라로 변하게 할지 모른다. 그것은 대학 학술 수준의 국제적 위치가 너무 낮고 학생 시위 등의 이유로 교육 기 능이 너무 장기간 둔화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탈공업 사회의 인력 요청에 맞지 않게 학생 정원을 책정해 왔고 설상가상으로 대학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세째로 '90년대 중반에 가면 大學 志望生이 없거나 中途 退學者가 많아져서 상당히 많은 大學은 폐과와 통합의 소동이 벌어질 것이다. 아직도 증과나 증원을 주장하는 대학이 많지만, 심각하게 전개될 대학 졸업생의 실직 문제는 분명 국민들로 하여금 대학에 가는 이유에 대하여 자각심을 불러 일으키

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을 다님으로써 어떤 깨우침이 자기 인생의 의미와 관계가 있다고 느낄 때 진학하게 됨으로써 무조건 대학을 가려는 풍조는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하여 살아 남는 대학은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의 변화에 꼭 맞추어 전공 계열과 학과를 통합 정비하는 大學이다. 또 이런 大學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즉 지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인간 능력의 바탕 위에 이론 체계의 핵을 개념적으로 추상화시키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원리적 소양을 갖추게 하여 자동화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운영하는 조직일 것이다.

그것은 지식을 배우는 데 필요한 지식, 즉 지식 학습 능력의 계통을 확립해서 변화에 대해 인격과 생활 방식을 함께 적응하도록 만드는 교육 방법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3. 增員政策의 方向

1) 文教部의 責務性 強化

한마디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大學設置와 增科 및 增員이 문교부에 의해 통제·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인 이상 大學의 學術의 水準의 低下와 量的 增大로 인하여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은 그 책임의 일단을 문교부가 짊 도리박에 없다.

어쨌든 겨우 인문·사회계와 이공계로 나누고 지역적 배분 정도를 해놓고 막후 교섭으로 결정되는 현금의 대학 정원 결정 방식에서 탈피할 때는 왔다

고 본다.

적어도 정치·사회·문화·경제 등의 발전 유형을 장기적으로 예견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부분별 산업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선진국의 유형을 참고하면 됨)한 후 여기에 대학 전공과 교육 내용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 대학 정원을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고도로 정밀한 인력 요청의 전망을 기획하는 새로운 행정 기법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교관료와 관련 연구요원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잘못해도 좋으니 그런 시도를 계획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이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는 자세라도 가다듬어야 할 일이다.

2) 大學의 學術水準 向上을 위한 自律的 努力

지금 현재 거의 모든 大學에서는 한 과에 수백명씩 되는 學生을 해마다 뽑고 學部에서는 학문 계통상으로 분류할 필요조차 없는 유사 학과를 세분화하는 무질서를 즐기며 전공과 무관한 교육 내용뿐 아니라 학관의 수준을 밀도는 교육 여건과 방법의 시행 착오를 경험하고 있다. 그저 學生 收容이지 교육 현장일 수 없는 처지인데도 학생 증원은 多多益善이라는 이런 교육적 양심의 망각증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하여간 大學街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增員·增科를 위한 압력과 사교와 술수로 들뜨게 한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私

學이 학교를 설치하려면 교육용 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인사·조직·교구·교재)을 갖춘 후 수익용 재산(수익 활동을 해서 학교 운영비의 90%를 전입할 수 있는 재산)을 구비해 놓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私學은 수익용 재산은 커녕 교육용 재산도 갖추지 않고 학생만 증원하여 여기서 뜯어내어 교육용 재산을 갖추자는 심산이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이런 줄을 알면서도 문교부는 계속 인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설치권자가 대통령인지 문교부장관인지 국회나 사법부인지도 미확정된 상태에서 그 설치와 제정 확보 그리고 운영에 대한 어떤 立法的 保障도 없이 자꾸 학과만 증설하려 든다.

분명 우리의 大學은 그 自體의 建學理念이나 設置目的이나 存在理由에 대한 自省論이나 와야 하고 이에 맞게 大學의 組織·人事·施設·財政·教育內容 등이 잘 짜여져서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발 기존의 학과가 이런 소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할 때는 증과나 증원보다 과감한 자기 혁신을 시도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분명 현재의 大學마다 부르짖고 있는 大學의 自律性은 대학이 해야 할 소임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해내는 능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國立이나 私立을 막론하고 이를 잃어 매는 다양한 법규의 정글을 걷어 치우

는 일(문교부가 앞장 서서)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연합하여 이를 위한 立法化를 서두르는 책임도 중요하다.

3) 學父母의 教育的 覺醒

수백만 명의 학부모들이 '70년도말에는 대학 입학 재수생으로 골치를 앓았지만 '80년도말에는 사회 진출 또는 직업 재수생으로 애간장을 썩히고 있다. 하여간 이 시점에서 문교부나 대학이 잘못된 데도 이유가 있지만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맹목적 교육열에도 그 책임의 소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분명 대학만 나오면 잘산다는 생각, 즉 教育을 立身出世의 수단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교육은 장래 사회 생활을 위한 준비일 뿐이며 人間됨을 바탕으로 人生의 뜻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예지를 키우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이 무의미한 삶을 창조하는 구실밖에 못하는 것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분명 大學을 가는

이유는 진리 탐구 자체에 가치를 느끼는 순수한 르네상스적 지식관이나 아는 것은 생활의 지혜를 찾는 길이라는 생활 개선적 가치관 등의 집념에서 찾아야 할 일이다.

4) 政治的 勸懲의 배제

大學 設置나 增員이나 豫算配定 등을 정치적 압력의 흥정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것은 교육의 百年之大計性을 보장함으로써 教育立國과 民族中興을 이루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은 교육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다. 교육은 "그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실시·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뿐 아니라 정당마다 대학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당리

당락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아 왔고 그 기풍이 더 심해질 듯이 보여진다. 제발 대학 설치나 증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바란다. 정치란 민족 공동의 생존과 번영의 좌표를 찾고 이에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 이상일 수 없을진대 지역과 파당과 계층간의 갈등과 욕구를 교육을 통해서 흥정해 보려는 생각을 한다면 일종의 망상이다.

4. 結 語

大學이 國力 伸張에 공헌하느냐 아니면 사회 붕괴의 요인으로 둔갑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의 대학이 어떤 자세를 가다듬느냐에 따라 해결할 수도 있고 영영 미해결의 장을 남길 수도 있다.

이것은 문교부와 대학, 학부모의 의지가 모여야 하고 정치가들은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망상을 버릴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